

# 반도체 특별법·연금개혁 이견에 국정협의회 개최 '불투명'

與, 화이트 칼라 이그젠션 도입과 모수·구조개혁 동시 진행 주장 野, 합의 사안 처리 후 논의 입장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부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에서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 주에 만나 국정협의회를 갖기로 했으나,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연기되면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4일 양당 정책위의장이 만나 이번 주 초에 국정협의회를 연다고 공식 발표했으나, 국민의힘 측에서 회담 연기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의 회담 연기의 주요 원인은 국정협의회 핵심 의제인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개혁에 대한 이견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난 8일 "실무협의에서 의제 협의를 못하고 국정협의회에서 난상토론으로 결정하는 것은 무리"라며 "실무협의에서 교통

정리 한 이후에 국정협의회 일정을 잡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자체 반도체 특별법안에 반도체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R&D) 등의 업무 종사자 중 근로소득 수준, 업무 수행방법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에 따라 당사자가 서면협의 하면 근로시간, 휴가와 휴일, 연장·야간 및 휴

일 근로를 적용받지 않게하는 이른바 '화이트 칼라 이그젠션(고소득 전문직의 주52시간 근로 예외조항)'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도 반도체 특별법에 해당 조항 도입을 논의하는 정책 디베이트를 열어 치열한 찬반 토론을 벌였으나, 이번엔 반도체 특별법의 시급

성에 따라 여야 합의한 사안만 담아 처리하고, 화이트 이그젠션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개혁을 놓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과 기초·지역·퇴직 연금 등 공적 연금과 연계한 노후 소득 보장 구조를 개선하는 '구조 개혁'을 동시에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말 거의 합의가 된 모수개혁부터 합의해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때 권영세 위원장이 신년 기자회견담회에서 "손쉽게 될 수 있다면 모수개혁부터 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양당이 '선(先)모수개혁'에 합의를 찾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구조개혁을 뺀 모수개혁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다시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회견담회에서 모수개혁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고, 구조개혁특위는 연금개혁특별위원

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두 개혁 모두 연금특위에서 더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년연장도 민주당이 정년 퇴직 연령과 연금 수급 연령 사이 '소득 공백'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야 한다며 '법적 정년 연장' 문제를 꺼내 들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노동 개혁 없는 정년 연장논의는 최근 우클릭 행보에 대한 민노총의 달래기용이자, 노조 간부들의 기득권 연장 목적"이라며 양당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양당의 정책 입장차에 국정협의회 개최까지 불투명해지면서 양당은 상대 정당을 비판하며 대립만 지속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9일 국회 소동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협의회 즉시 가동을 국민의힘에 요청했다. 한 대변인은 "민주당은 시급한 추경 편성과 민생 입법 처리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 與 '조기대선' 선긋기 무색... 오세훈·홍준표·한동훈 등 본격행보

오세훈, 토론회 열며 의원들에 초청장 홍준표, SNS 등서 대권 도전의사 밝혀 한동훈, 재야 인사 만남... 공개행보 전망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의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자, 여권 '잠룡'들이 움직이고 있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공식적으로는 조기대선과 선을 긋는 모양새가 무색하게 여권의 대권 주자들은 수면 아래에서 활발히 움직이며 사실상 대권 행보를 시작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12일 국회에서 지방분권을 주제로 개헌 토론회를 연다. 오 시장이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국회를 공식적으로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오 시장은 이번 토론회를 위해 여당 의원들에게 초청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이 사실상

대선후보 경선을 염두에 두고 세력화를 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여권에서 나온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진작에 차기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힌 상태다. 최근에는 자신의 SNS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헌법재판소 편향성 논란 등을 언급하며, 여권 내 강성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다.

홍 시장은 지난달 자신의 자서전 '정

치가 왜 아래'를 출간했다. 통상적으로 유력 정치인들은 자서전 출판과 함께 대권 도전 의지를 밝힌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당대표 사퇴 후 설 연휴 동안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등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한 전 대표는 조만간 공개 행보를 할 전

망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변론기일이 종료되면 움직일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 주자 중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거론된다. 김 장관은 "조기 대선 출마는 생각한 것이 없다"고 밝혀 왔지만, 최근 '탄핵 인용 시 출마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과 국민에게 예의가 아니다"라고만 답하며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잠룡으로 분류된다. 유 전 의원은 지난달 22일 "나는 늘 대선에 도전할 꿈을 갖고 있던 사람이고 버리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강하게 비판하며 탄핵에 찬성해, '쇄신 이미지'와 '중도 확장성'을 앞세우고 있다. 또 당내 '경제 전문가'라는 이미지도 갖고 있다.

일각에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도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윤석열 정부 초대 국토부 장관을 역임한데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친윤(친윤석열)계의 지원을 받은 만큼, 조

기 대선 언급은 자제하고 있지만 원 전 장관은 최근 국회의사당 인근 사무실에 매일 출근하고, 보수진영 인사들과 만나며 탄핵 정국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예진 기자 syj@

## 헌재, 오늘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 재개

'여야 합의 여부' 최대 쟁점 될 듯 권한쟁의심판 청구 절차 언급 전망

헌법재판소가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을 재개한다. 국회 측과 최 권한대행 측은 여야가 헌법재판관 임명을 합의했는지 여부를 두고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우원식 국회의장 측은 국민의힘이 마은혁 후보자를 포함한 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에 동의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공문을 제출했다.

해당 공문은 지난해 12월 11일 국민의힘이 의장실에 낸 것으로, 마은혁 후보자 등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하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위원장으로 정점식 의원, 여당 간사로 과규택 의원, 청문위원으로는 김대식·김기웅·박성훈 의원을 각각 선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민의힘이 이 공문을 보낸 당일 더불어민주당도 특위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우 의장 측에 명단을 보냈으며, 국회의사과는 인청특위 위원 선임안을 확정한다는 회신을 양당에 통지했다는 것이 국회 측의 주장이다.

국회 측이 위의 공문들을 증거로 제

출한 것은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인청특위 위원장 및 위원들을 선임해 의장실에 낸 만큼, 헌법재판관 선출 과정에서 여야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기 위함이다.

반면, 최상목 권한대행 측은 재판관 임명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며, 실질적 합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당 공문수·발신 시점에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공백 상태였고, 원내지도부가 구성된 이후 민주당 측에서 합의를 깬다는 무효라는 것이다.

이에 10일 재개되는 변론기일에서는 '여야 합의' 여부가 가장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권한쟁의심판 청구 절차도 언급될 전망이다. /서예진 기자

## 李 비판하는 비명계... '통합' 과제 수면 위로

임종석·고민정 등 비명계 움직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적 위기를 맞으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비명(비이재명)계에 비판을 받고 있어 '이재명 체제 민주당'의 오랜 과제인 '통합'이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비명계는 민주당의 이재명 '일극 체제' 재편 과정에서 총선 공천을 받지 못하는 식으로 원내 진입에 거의 실패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보수 결집이 빠르게 진행되자, 정권 교체에 위해서라면 비명계도 끌어안고 세력을 불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

오기 시작했다.

최근 가장 공격 수위를 높이는 비명계 인사는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다. 임 실장은 9일 자신의 SNS에 "지난 대선 때도 빨간불이 깜박이는 데 앞만 보고 갔다"며 "언론과 여론조사가 지속해서 경고음을 보냈지만 무시했다. 당내 역량을 통합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밀어내기 바빴다"고 지적했다.

당내에서도 최고위원 출신인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망하는 길로 가는 민주당의 모습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됐다"고 말하면서 비명계의 움직임은 더 활발해지고 있다. /박태홍 기자